

중국의 임금 상승 '세계공장' 시대 막 내리나?(1)

글 : LGERI

중국의 저임금 시대가 저물고 있다. 올 들어 법정 최저임금이 평균 20%나 급등한 가운데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도 잇따르고 있어 '세계공장'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유난히 커 보인 것은 2009년의 미반영분까지 반영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임금 수준은 베트남, 인도 등 신흥국가와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 멕시코 등 일부 개발도상국의 절반 수준이어서 경제발전 수준과 임금간의 괴리가 있다. 중국 정부는 임금 인상을 경제구조전환, 양극화 해소 및 사회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목적카드로 삼고 있다. 중국 근로자들의 권익의식 제고 및 신세대 농민공들의 부상으로 노동분쟁의 발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저임 제조업 공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가 2015년까지 평균 임금을 현재의 두 배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향후 임금 상승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생산성을 초월해 임금상승이 이뤄지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산업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 이외에 양호한 물류 인프라와 제조업 클러스터, 제도적 환경, 특히 거대한 내수시장의 잠재력은 중국이 생산지로서 갖고 있는 남다른 매력이다. 인건비 상승의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화와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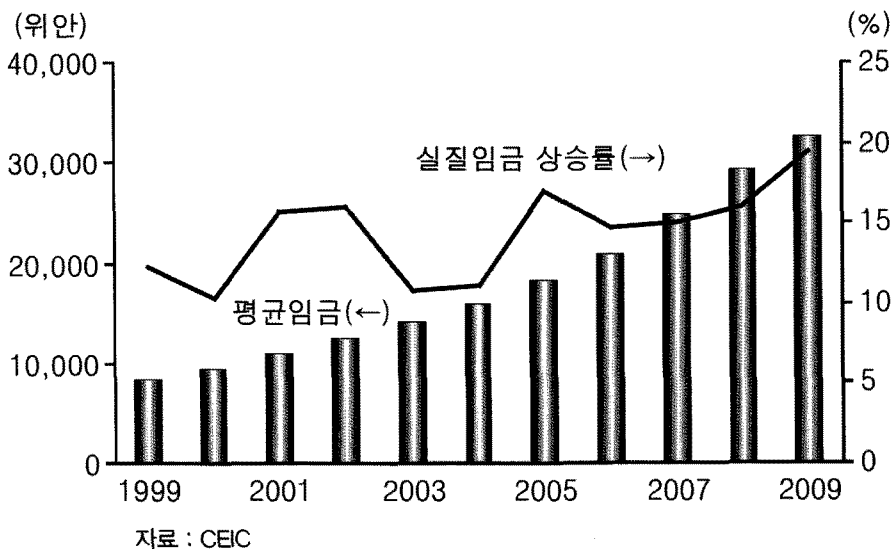
최근 중국 노동시장은 잇따른 파업 사태와 임금 인상 파동으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폭스콘 중국 선전공장의 연쇄 자살 사건을 계기로 다국적 기업들의 '노동 착취와 도덕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현 임금 수준의 불합리함을 성토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폭스콘이 급기야 기본급을 9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122% 상향 조정한데 이어, 일본 혼다차 포산 공장도 34% 인상안을 타결해 사태를 진정

시켰지만 선두기업 임금 인상에 따른 '양떼효과'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임금 인상의 물결이 확산되는 와중에 올 들어 14개 주요 도시의 최저임금이 평균 20% 급등했다. 중국 저임금 시대의 종언이 현실화 되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생산기지를 아예 동남아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과연 중국이 '세계의 공장' 으로서 누렸던 '봄날' 은 간 것인가?

I. 임금상승의 실체와 배경

1. 금융위기 이후 뒤늦은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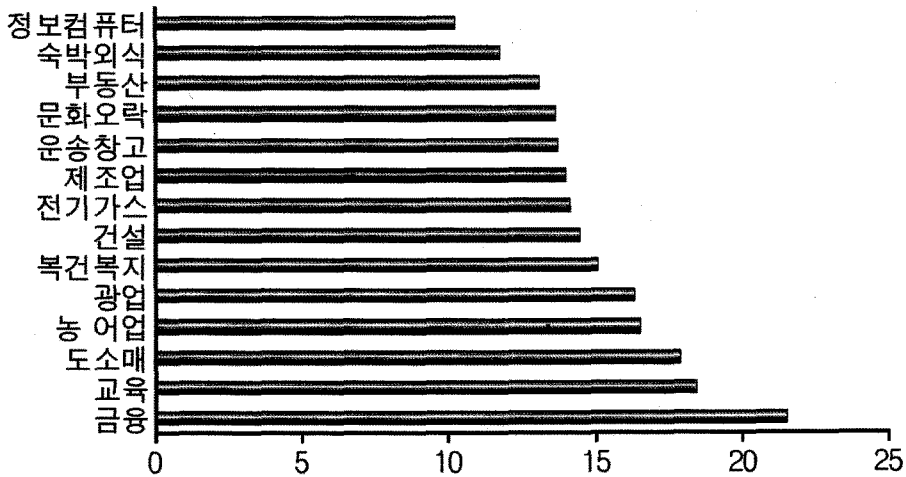
먼저 중국 임금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와 최근의 변화 추세에 대해 유심히 살펴본다. 중국의 실질 임금 상승세는 대체로 과거와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다소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0년~2009년 물가 요인을 제거한 실질 임금 상승률이 연평균 14.6%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최근 3년 동안의 증가세는 연 16%를 넘어섰다(〈그림 1〉 참조).



〈그림 1〉 중국의 임금추이

지역적으로 보면 중서부 내륙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도 역시 후베이(28.6%), 후난(27.8%) 등 내륙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업종별 임금 상승 추이를 보면 최근 논란의 초점인 제조업의 임금증가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교육 등 서비스업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이 20% 안팎인 반면 농촌 잉여인력 유입이 가장 왕성한 제조업은 14%로 전 업종의 평균수준에 머물고 있다(〈그림 2〉 참조).



* '07~'09 연평균 증가율
자료 : CEIC

〈그림 2〉 업종별 임금 상승 추이

올해 중국 각 지역의 법정 최저임금 인상 폭은 유난히 커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4년 이후 매년 최저 임금을 상향 조정해왔던 중국정부가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임금을 동결했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이번 임금 인상은 2009년의 미 반영분까지 반영한 일종의 '뒤늦은 조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는 실제 인상 폭이 그리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상승폭이 해당 지역 과거 2년간 누적 명목 GDP 증가율보다 낮을뿐 아니라 같은 기간 그 지역의 평균 임금 증가율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상하이의 최저임금 인상률인 29%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격차 최저임금 수준의 합리성을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평균 임금의 40% 이상이면 높은 수준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중국의 대부분 지역은 아직 40% 이하여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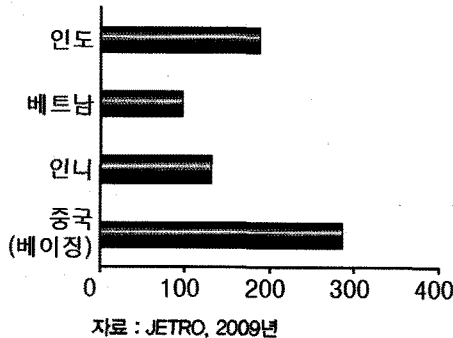
〈표 1〉 2010년 최저임금 인상

지역	인상전 ('08, 위안)	인상후 ('10, 위안)	인상폭 (%)	명목GDP 성장률(%) ('09/'07)	평균 임금 증가율 ('09/'07)	최저임금/ 평균임금 (%)
톈진	820	920	12	49	29	26
장쑤	850	960	13	33	31	36
저장	960	1100	15	23	20	39
상하이	960	1120	17	22	29	24
산시	720	850	18	29	32	39
광둥	860	1,030	20	26	23	37
베이징	800	960	20	32	25	20
푸젠	750	900	20	29	29	42
산둥	760	920	21	31	30	42
닝샤	560	710	27	60	30	28
후난	665	850	28	41	27	37
후베이	700	900	29	39	37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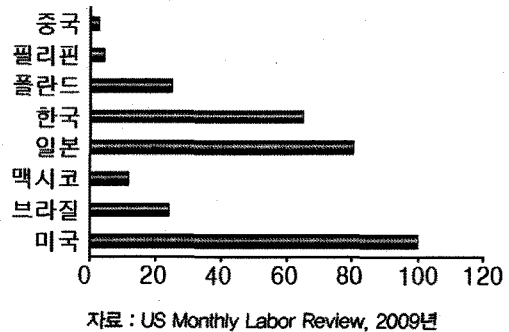
자료 : 중국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 CEIC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면, 최근의 임금 상승세를 감안해도 중국의 제조업 임금의 절대수준은 여전히 중국보다 현격하게 낮은 수준에 있다. 2009년 미국 노동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 제조업 시급 기준으로 중국은 미국의 2.7%, 일본의 3.4% 밖에 되지 않았으며, 개발도상국인 멕시코의 1/4, 필리핀의 2/3에도 미치지 못했다. 실제로 중국 일부 대도시에서 영화 한편 값이 한화 1만원, 커피 한잔이 5,000원이 될 정도로 물가가 이미 한국과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중국 제조업 저임 노동자들은 한 달에 20~30만원으로 버텨야만 한다. 따라서 중국 경제발전 수준과 임금 수준 간에는 아직도 괴리가 커 향후 임금 상승 여지가 많아 보인다. 다만 2009년 기준으로 중국의 임금은 베트남의 3배, 인도네시아의 1.5배에 달했고 이들 신흥국가와의 임금격차가 점차 벌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일부 경쟁력을 상실한 노동집약적인 업종들은 동남아로 이탈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림 3>> 참조.





〈그림 3〉 국가별 임금비교(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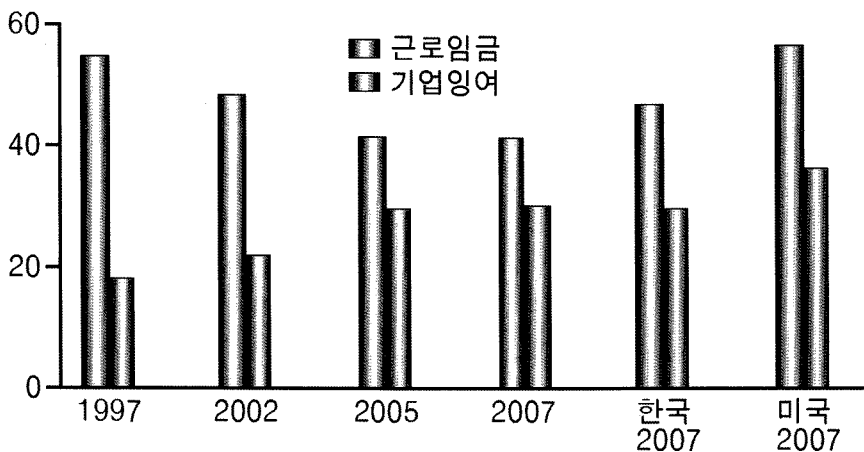
국가별 임금비교(미국=100)

2. ‘균부론(均富論)’ 을 지향하는 정부정책

중국 임금이 상당기간 고속 상승의 궤도에 진입한 것은 경제 발전과 사회 선진화 과정에서 자연스레 나타나는 일종의 ‘성장통’ 이지만 중국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연관이 깊다. ‘균부론’ 을 주창하고, ‘민생’ 과 ‘허세’ 를 내세운 후진타오 정부는 중국의 현재 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양극화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먼저 ‘서츠 1억 개를 수출해 비행기 한 대를 사들인다’ 는 식의 저임 기반 성장방식이 언젠가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지속 가능성장의 관점에서 불가피하다. 임금 인상은 소득 증대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내수 진작 정책 기초와 일맥상통하다. 또 중국의 임금이 GDP에서 차지한 비중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에 41.3%로 미국 56.6%, 한국 46.8%보다 크게 낮다. 이처럼 중국 근로자 소득증가가 기업의 이윤증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임금에 의지



하는 중, 저소득 계층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하면서 소비확대 제약 및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그림 4) 참조). 중국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가 지난 80년대의 7.3배에서 2007년의 23배로 확대했고, 지니계수도 2009년에 0.49(사회과학원)로 위험수위를 넘었다. 저소득층들의 불만이 자칫 반체제 운동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고, 이런 의미에서 임금인상은 사회안정을 위한 유효 수단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정부는 그동안 '삶의 질'을 강조하면서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친노동자 정책 기조를 고수해 왔다. 농민 소득을 제고하는 '三農' 정책, 인구 이동을 제한하는 호구제도 완화를 비롯해 노동 안전성을 보장하는 '근로계약법' 등은 바로 이런 취지에서 나왔다. 특히 이번 전인대에서 '노동자의 존엄'을 재차 강조하면서 사상처음으로 '신시대 농민공'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을 정부공작보고에 포함시켰다. 현재 검토중인 '임금조례'도 임금 단체 협상, 독점 업종의 임금 내역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의 '소득 분배 불균형 해소'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주 : CEIC Input-Output Table를 근거로 계산한 결과임
 자료 : 중국통계국, 한국은행, 미 상무부

〈그림 2〉 업종별 임금 상승 추이

중국은 이번 '임금인상 물결'을 '해곡된 임금 수준의 정상화 과정' 및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요구'로 정의하고,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성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희생을 대가로 이뤄졌지만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다',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경제발전의 성과를 향유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부분 주요 언론도 노동자를 단지 생산요소의 하나로 간주하고 그들의 인간성을 무시하고 있다며, 외자기업에 대해 분개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 언론의 입장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의도와 일치하고, 중국의 사회체제 특성상 중국의 정책 영향력이 결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금상승 추세가 계속되는 대세임은 분명하다.

▶ 다음호에 계속